

에너지시상

러 가스관, 서해노선으로 사실상 확정

북한통과 노선보다 투자비, 안전성, 운영비 등에서 유리

한국가스공사 오강현 사장은 한·중·러 3국이 추진중인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전의 국내 도입 경로가 서해노선으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오 사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아직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가스전 개발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차원에서 볼 때 투자비가 서해노선보다 45%이상 더 많이 소요되는 북한 통과노선은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르쿠츠크-창춘-선양-다롄-평택을 잇는 해저노선은 3국의 공동 타당성 조사결과 이르쿠츠크-선양-북한-평택을 연결하는 북한통과 노선보다 투자비, 노선 안전성, 운영비 차원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4월까지 노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가스전 투자와 관련하여 “3국간 가격 협상은 연내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현재 도입가격보다 30%이상 낮춰야 사업성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러시아가 높은 가격을 고집할 경우 사할린

프로젝트로 도입선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사장은 이와함께 “수익선 다변화를 위해 LNG 선박을 도입, 중개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며 주주 가치 증대 차원에서 올해에도 주당 1500원 이상을 배당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서울대 원전센터' 파문 확산

지자체 반발 이어 환경단체들 반대 움직임 가세

서울대 부지 내 관악산에 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을 유치하자 서울대 교수들의 제안을 둘러싸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관할 관악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데 이어 환경단체들이 반대 움직임에 가세했다.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서울대 환경동아리 학생 20여명은 8일 낮 서울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대 교수들은 학생·지역주민·관악산을 찾는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은 채 원전센터 유치를 제안했다”며 “이는 관악산을 서울대의 소유물로 여기는 특권 의식”이라고 비난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발표, “서울

대 교수들의 원자력에 대한 맹신을 규탄한다”며 “교수들의 제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환경연합도 “부안사태의 핵심은 핵폐기장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중심의 전력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관악구청은 9일 지역 주민 대표와 구 의원 등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관악산을 접하고 있는 금천구·안양시·과천시 등 인근 지자체들과도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대의 입장은 관악산 유치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악산 유치 서명을 주도한 원자핵공학과 강창순 교수는 “관악산이 원전센터 부지로 손색이 없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한 뒤 “서울대의 환경·원자력·지역개발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집단이 유치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서명에 참여한 한 교수는 “정운찬 총장도 서명 교수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으며 진지하게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유근배 기획실장은 “기획실에서 원전센터에 대해 사회·정치·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 본격적인 실무 검토에 착수하지는 못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join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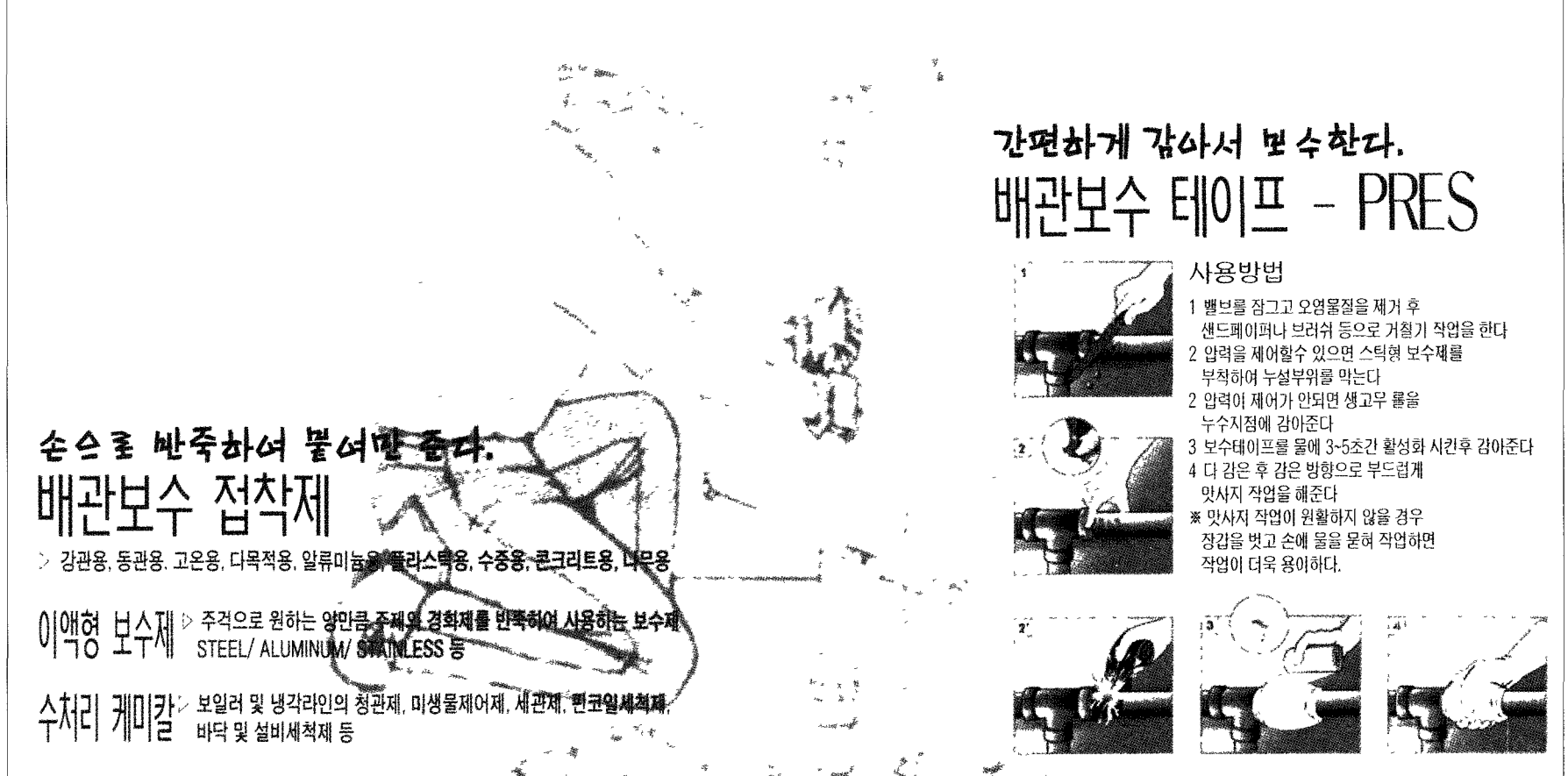
에너지·자원사업 예산 총 2조1661억

산자부, 예특회계 확정...
전년대비 9.4% 감소

정부는 금년도 에너지·자원사업부의 주요 역점 사업으로 석유비축, 국내의 유전개발 등 석유위기 대응능력 강화와 함께 석탄산업합리화의 지속 추진,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기후변화협약 등 지속가능 발전 에너지시스템의 구축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사업 추진에 우선점을 둔 2004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예특회계) 지원 예산 2조1661억원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의 2조3896억원보다 9.4% 감소된 것이다. 산자부는 금년도에 석유·가스 등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석유비축 등을 통한 석유위기 대응능력 강화, 국내외 유전개발, 천연가스 공급 시설 확충, 석유 등 품질관리비 지원 등에 지난해의 7788억원 보다 12.3%가 감소된 총 6831억원을 지원하고, 친

새고 있는 배관! 손쉽게 해결한다.



간편하게 감사서 보수한다.
배관보수 테이프 - PRES

사용방법
1 땀보를 잡고 오염물질을 제거 후 샌드페이퍼나 브러쉬 등으로 거칠기 작업을 한다

2 압력을 제어할수 있으면 스틱형 보수재를 부착하여 누설부위를 막는다
2 압력이 제어가 안되면 생고무 물을 누수지점에 감아준다

3 보수테이프를 물에 3-5초간 활성화 시킨후 감아준다
4 다 감은 후 감은 방향으로 부드럽게 맞사지 작업을 해준다
※ 맞사지 작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장갑을 벗고 손에 물을 묻혀 작업하면 작업이 더욱 용이하다.

손으로 반죽하여 붙여만 준다.
배관보수 접착제

> 강관용, 동관용, 고온용, 다목적용, 알루미늄, 플라스틱용, 수중용, 콘크리트용, 나무용

이액형 보수제 > 주격으로 원하는 양만큼 주제를 경화제를 반죽하여 사용하는 보수제
STEEL/ ALUMINUM/ STAINLESS 등

수처리 케미칼 > 보일러 및 냉각라인의 청관제, 미생물제어제, 세관제, 편균일체제, 바닥 및 설비세척제 등



환경적인 에너지시스템의 구축,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등 지속가능발전 에너지시스템 구축 사업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총 6738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산자부는 신재생 에너지 지원 확대(588억원), 지역특성에 적합한 에너지공급시스템 구축(509억원), 태양광 3만호 보급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지난해의 858억원에서 1757억원으로 무려 104.8% 증액시켰다.

또한 국내 석탄수요 감소로 인한 석탄생산 관련 지원금은 감축하고,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올해 총 4477억원의 사업비를 책정, 지난해의 4904억원 대비 8.7% 줄였다.

국내 일반광업 진흥 및 주요 광물자원의 안정 공급 지원 예산도 총 1558억원으로 지난해의 1569억원 보다 소폭(0.7%) 줄여 편성했다.

<에너지경제신문>

2011년까지 전력생산량 7%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9조1천억원 소요, 에텍 및 전력산업 기반기금 활용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체 전력량의 7%를 공급하고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를 위해 특단의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모색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됐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확정된 '제2차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기본계획'을 통해 2011년까지 국내 총 1차 에너지사용량의 5%, 총 전력생산량의 7%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2011년 1차 에너지사용량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총 9조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산자부는 우선적으로 에너지자원특별회계를 사용하고 나머지 부문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너지관련 부과금을 추가 부담토록 하는 등의 특단의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1차 계획에 없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기존의 7개 에너지자원에 연료전지, 수소, 가스화복합발전 등 4개 신에너지를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폐기물의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순수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해 에너지원별 믹스(mix)를 도입했

다.

산자부는 마련된 목표의 달성을 위해 ▶ 발전사업자에게 적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구매토록 하는 발전의무비율 할당제 도입 ▶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절차 개선 ▶ 생산된 전기를 한전의 전력계통에 연계 가능토록 기술규정 등의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관세감면 대상의 연차적 확대, 시설투자금에 대한 세금감면 확대, 융자금 대출기간을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하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제도 강화 ▶ 대체에너지법을 신·재생에너지보급촉진법으로 개편 ▶ 이용·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입 검토 ▶ 전담조직 보강 등의 제도 및 정책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산자부는 "신재생에너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대외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고 에너지안보 및 환경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다"며 "2011년까지 5% 보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산업신문>

온난화 지속속면 50년내 생물 24% 멸종

선진국의 무분별 온실가스 배출 원인

지구 온난화가 현 추세대로 지속된다면 2050년까지 지구상의 동·식물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1백25만종 가량이 멸종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경고했다.

영국 리즈대학의 크리스 토머스 박사가 이끄는 19명의 연구진은 과학잡지 네이처 최신호(8일자)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난화로 평원이 사막으로 바뀌고 숲이 파괴됨에 따라 지구상의 생물종 가운데 15~37%가 50년 안에 멸종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영국 북부, 호주 동북부, 멕시코 사막, 브라질 아마존 지역, 남아공 남부지역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5개 지역에 서식하는 동·식물 1,103종을 대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얻어졌다. 연구진은 지구온난화 현상을 예측한 유엔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의 기후변화 모델을 적용, 지구의 평균기온이 2100년에는 지금보다 1.4~5.8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후 변화의 3가지 시나리오 중 중간단계 예측에 따르면 2050년까지 생물종의 24%가 완전 멸종에 이르게 된다. 반론도 제기됐다. 조지 마셜 연구소의 윌리엄 오키프 소장은 "이 연구는 생물종이 기온상승에 적응하는 능력을 무시한 데다 기술발전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연구진은 컴퓨터 모델을 이용한 기후예측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도 선진국들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예측대로 생물종의 대거멸종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향신문>

LNG 지분투자로 9,000만달러 수익

KORAS-5,008만달러, KOLNG-3,980만달러 배당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카타르 라스라판 LNG 프로젝트와 오만 LNG 프로젝트에의 5% 지분 투자사업으로 지난해 동안 약 9,000만달러의 배당수익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카타르의 KORAS로부터 총 5,007만 5,828달러, 오만의 KOLNG로부터 총 3,980만달러의 배당수익을 올렸다.

이 같이 지난해 KORAS와 KOLNG로부터 받은 배당수익이 전년에 비해 많아진 것은 높은 유가 적용 때문으로 지난해 JCC 30달러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KORAS로부터 2001년 3,844만달러, 2002년 2,878만달러의 배당수익을 올린다 있으며 KOLNG로부터는 2002년 2,020만달러의 배당수익을 올렸었다.

이에 따라 카타르 KORAS에 5%를 참여하고 있는 국내 주주사들은 지분율에 따라 가스공사 약 3,004만달러(60%), 삼성 약 501만달러(10%), 현대·SK 400만달러(8%), LG 280만달러(5.6%), 대성 270만달러(5.4%), 한화 150만달러(3%)를 각각 배당받았다.

또한 오만 KOLNG에 5%를 참여하고 있는 국내 주주사중 가스공사가 955만달러(24%), 삼성 현대·대우가 각각 796만달러(20%), SK가 637만달러(16%)의 배당수익을 각각 챙겼다.

한편 올해의 경우 적용유가 JCC가 25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KORAS로부터 약 4,000만달러, KOLNG로부터 약 2,800만달러의 배당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에너지원별 열량기준 환산단위 개정

"산자부, 3월말까지 계측 및 검증 완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에너지원 및 제품에 대한 현행 열량기준 환산단위가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지난 13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박태식 팀장, 에너지관리공단 김찬규 팀장, 산업기술대 강승진 교수, 석유·석탄·LPG수입사·전기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량개정 검토회의를 가졌다.

현재 천연가스(인도네시아 아룬산 기준)는 부피 및 무게기준으로, 도시가스는 공급기준에 따라 열량을 고시하고 있으며 아스팔트·수입무연탄·발전용 무연탄에 대한 단위열량은 석유 환산기준과 별도로 정하고 있고 용제는 80년 고시열량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97년부터 석유통계에 포함 된 윤활유, 파라핀왁스, 석유코크, 기타 석유제품에 대한 열량기준은 정부에서 고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유공사의 열량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자부는 현행 열량기준을 올해 3월 말까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규칙의 개정일정에 맞추거나 별도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스산업신문>

대기오염 1만명 조기사망

"매년 수도권서만...경제손실 10조"

대기오염, 특히 대기중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연간 1만1천여명이 조기사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연구는 특히 대기오염에 따른 조기사망 및 각종 질환으로 매년 수도권에서 최대 10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서울대학교에 의뢰, 환경부의 대기오염 측정자료에 나타난 역사상 가장 낮은 대기오염도와 지난 2001년말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비교, 조기사망자수와 질환증가수 등을 추정한 '경기도지역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추정 및 적정수준 달성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26일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역사상 최저 오염도는 아황산가스(SO₂)의 경우 0.002ppm, 아황산질소(NO₂)는 0.005ppm, 일산화탄소(CO)는 0.259ppm, 미세먼지(PM)는 18.0μg/m³, 오존(O₃)은 0.003ppm 이었다.

이 같은 오염물질 농도는 지난 2001년 일산화탄소의 경우 경기도 0.947ppm, 서울 0.9ppm, 인천 0.7ppm으로, 아황산가스는 경기도 0.007ppm, 서울 0.005ppm, 인천 0.007ppm으로 각각 높아졌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도 67.0 μg/m³, 서울 71μg/m³, 인천 52μg/m³으로 크게 높아졌다.